

“국회의원, 종부세 셀프 완화…납부 대상 일반 국민의 11배”

2023년 완화 전 기준 적용하면 82명이 대상…완화 후 60명으로 줄어
정치 권력자·고위 공무원 막대한 부동산 보유…서민 감세 주장과 배치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실태 조사

제22대 국회의원 20%가량은 주택과 토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 국민에 비해 11배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

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382억4000여만원과 토지 1000여만원 등 총 382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000만원), 김은혜(201억8000만원), 서명욱(186억7000만원), 백중현(183억3000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1.8%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치권은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소수의 정치권력자와 고위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할 것,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변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 담양군수 배출, 호남 정치 혁신의 신호탄”

서왕진 광주시당 위원장 “주민의 삶 바꾸는 성과 내겠다”

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 후보는 최근 담양군수 재선거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이며 호남 정치 혁신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호남은 국민의힘이 발붙일 수 없는 정치 지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가 굳어졌지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호남 정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혁신당으로서는 호남 정치혁신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진지를 하나 마련한 만큼, 호남에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풀뿌리 정부의 기반을 더

욱 튼튼히 다져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는 당만 보고 뽑을 시기는 지났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주민들께 많이 들었다”며 “지역 토박이이자 흙수저 출신인 우리 후보에 대한 신뢰와 조국혁신당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군수는 3선 군의원 출신으로,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왔다.

서 의원은 “좋은 후보,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이 이번 승리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조국혁신당의 호남 전략에 대해 서 의원은



“단순한 비판 세력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정치는 다르다”는 것을 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의 연계 등 호남의 강점을 살린 정책 제안과 실

력 있는 후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각 구별 지역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치 신인을 양성할 ‘혁신정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원들과의 소통 채널 강화, 지역 비전 설계 등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지역 기반의 대중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방정가 라운지

지역 중소기업 연구 인력 자격 요건 완화

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의

전남도의회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 인력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부설 연구소 내 연구전담요원 확충 필요성에도,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이 높아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민주·장흥 2)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 38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구감소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연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연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자연계 학사 이상 전공 제한 완화,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취득자 경력 요건 완화, 소기업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허용 기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기업들의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온 한덕수 대행, 기아공장 방문

“미국 관세 대응 협상 최선”…대선 앞 정치적 행보 시각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했다.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지만, 대선과 맞물린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 기아오토랜드를 방문해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동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등을 통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의 광주 기아공장 방문은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켰다. 하지만, 명백하게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데다 굳이 광주를 방문지로 택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미국이 관세를 유예한 시점에서 방문의 실효성도 없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당초 한 대행은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한편, 이날 광주 시민단체는 “내란 동조자인 한총리가 무슨 낯으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찾아오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 대행이 아니고 내란 대행”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